

---

#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

---

2023. 2.



금 융 감 독 원

## 목 차

다.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·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..... 25

# I. 2023년 금융감독 방향

## 1 금융감독 환경

### 가 대내외 경제·금융 여건

◆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,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요인 부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

① **(대외)** 글로벌 통화긴축, 중국 경기 둔화,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, 에너지난 등의 영향으로 '22년에 비해 경제성장 둔화 전망\*

\* 성장률 전망('22→'23): (IMF, '23.1월) 3.2% → 2.9%, (World Bank, '23.1월) 2.9% → 1.7%

○ 주가는 상반기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, 하반기 연준정책의 전환 기대감이 상승 변수가 될 전망

- 금리는 긴축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'上高下底'의 흐름이 예상되며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強달러 현상이 점차 약화될 전망\*

\* 단, 상반기중 美 소비·성장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인플레이의 하향 안정세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 추가 긴축 논의 우려 등으로 금리 및 달러가치 재급등 소지

○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불안 및 디폴트 확산,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
② **(대내)** 고물가·고금리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, 글로벌 경기위축 및 분절화(Fragmentation)\*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\*\*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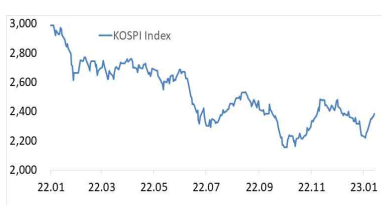
\* IMF는 세계경제 분절화·국제협력 약화를 리스크요인으로 지목(World Economic Outlook '22.10월)

\*\* 성장률 전망('22→'23, %): (한은 '22.11월) 2.6 → 1.7, (IMF '23.1월) 2.6 → 1.7, (OECD '22.11월) 2.7 → 1.8

○ 국내 금융시장은 상반기중에는 통화긴축 기조로 제한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다 하반기 긴축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점진적 회복 전망

- 다만, 부동산경기 둔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,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상환능력 약화 및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은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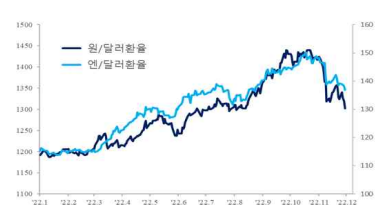
주가지수



국채(10년물) 금리



환율



## 나 2023년도 주요 리스크요인

- ◆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, 서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금융 악화, 디지털화 및 융복합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, 금융산업 신뢰 하락에 직면

### ①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

-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둔화 및 가계·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, 부동산·채권 등의 자산가격 조정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증대
  - 채권·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으로 취약업종의 차환리스크가 심화되고 외부 충격발생시 금융권 전이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

### ② 서민 등 취약계층 민생금융 악화 및 소비자피해 확대

- 고물가·고금리, 경기 둔화 등 경제 여건 악화로 다중채무자·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한계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 악화
  -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영업행태 출현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가하고,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하락 우려

### ③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·비금융부문간 상호연계성 강화

- 금융의 디지털화·플랫폼화 및 제판분리 가속화\* 등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확대 가능성
  - \* 온라인 플랫폼 등의 금융상품 중개영업 확대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흐름 확산
  - 금융회사 핵심업무의 외부 위탁·제휴 확대로 보안·IT 등 제3자 리스크가 커지고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확대

### ④ 금융부문 신뢰 하락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확대

- 거액 횡령사고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책임지지 않는 경영 관행 등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
  -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교란 등 증권범죄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확대 가능성

## 2 금융감독 방향

### 가 기본방향

◆ “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”을 목표로, 4대 추진전략 / 12개 핵심과제 수립

#### (전략 1)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쏠 방위적 대응 강화

- ① (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) 리스크요인 조기 파악 및 진단 분석체계 고도화,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
- ② (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) 금융시장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능력 제고
- ③ (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)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 구축

#### (전략 2)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

- ① (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)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·비금융 지원 강화, 금융소외 계층 대상의 금융서비스 및 상품 개선
- ② (소비자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)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,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사후구제 실효성 강화
- ③ (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노력 강화)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·홍보·조사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, 리딩방·SNS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행위 집중 감시

#### (전략 3)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

- ① (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)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 육성, IT 리스크 감독 강화 및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
- ② (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확충)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,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, ESG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감독체계 마련
- ③ (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) 금융혁신을 위한 감독 인프라 확충, 검사·제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

#### (전략 4)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

- ① (금융회사 책임경영 관행 기반 조성)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및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유도,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경영 환경 조성
- ② (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) 자본시장 공정기반 확충, 공시·회계 정보의 투명성·신뢰도 제고, 조사업무 인프라 개선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단
- ③ (금융질서 저해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) 금리상승기 소비자피해 우려 부당영업행위 근절, 보험권 완전판매 문화 정착 유도, 투자자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

# 2023 금융감독 방향

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
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

##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

### 전략 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쏘 방위적 대응 강화



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 
대한 선제적 대응



금융회사의  
위기대응능력 확충



금융회사 건전성  
감독제도 개선

### 전략 ②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



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



소비자중심의  
금융생태계 구축



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 
및 예방노력 강화

### 전략 ③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



금융산업의 건전한  
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



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 
장기 성장 동력 확충



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 
감독업무 쇄신

### 전략 ④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



금융회사 책임경영  
관행 기반 조성



신뢰할 수 있는  
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



금융질서 저해 불건전  
영업행위 엄정 대응



## 2023 업무계획 기대효과



### 금융시장 안정 및 질서 확립

금융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 
건전한 시장발전 지속



###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

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 
따뜻한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 
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



### 금융산업의 신뢰 및 혁신

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 
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성장 실현



### 금융감독 혁신

금융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 
과감한 감독업무 혁신 추진



금융감독원

## Ⅱ.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

### 1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쏠 방위적 대응 강화

#### 가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◆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,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적 대응 제고

#### ① 리스크요인 조기 파악 및 진단 분석체계 고도화

##### □ 대내외 취약 리스크요인 사전 포착 및 신속 대응

- 美 긴축,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 및 부동산·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
- 채권·단기금융시장 경색, 비은행권 리스크, 부동산PF 등 취약 부문을 통한 위험 전이 및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 점검
- 시장 불확실성 현재화 우려시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\*하고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공조체계 가동

\*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/F 회의 및 해외사무소 연계 「24시간 비상대응반」 운영

##### □ 시스템리스크 진단·분석 인프라 고도화

-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\* 정교화

\* 신용손실 추정모형, 영업이익 추정모형 등

-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시스템 리스크 분석체계 마련
- 조기경보모형의 예측기간을 확대하고 모형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모형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



## ②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

### □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상황 급변동 대비 모니터링 강화

-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은행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리스크 선행지표를 고도화\*하여 종합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
  - \* 신용(가계·기업), 시장(금리·환율·주식), 유동성 등 관련 선행지표 집중 모니터링
- 외국인 투자동향 등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등 강구

### □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 집중 점검

-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하여 PF사업리스크\*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 강화
  - \* 예) ① 금융권역별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  
② PF 사업유형(주택, 상업시설 등), PF사업 진행상황(공정률, 분양률 등) 등 분석체계 세분화를 통해 체계적 관리
- 부동산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
- 증권사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요인\*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(부동산, 비부동산), 유형별(신용공여, 유동성 공유) 현황 등에 대해 심층 분석
  - \* 채무보증의 사업승인위험, 준공위험, 분양위험, 회수위험 등
- 보험회사 특정 부분 리스크 쏠림 등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체계,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\* 점검
  - \*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, 「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」 준수 여부 등

### □ 비은행권 유동성리스크 관리 정교화 및 상시감시 강화

- 증권사의 단기조달 특성 및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추진\*
  - \* 예)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비율 도입 등
- 유동성 부족 우려가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, 여전사의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 운영현황 점검

## □ 경기둔화에 취약한 기업 및 자영업자 리스크관리 강화

- 高물가·高금리·高환율(3高) 취약업종 내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\* 추진

\* 예) (일시적 위기기업) 신속금융지원제도 등 (부실징후기업) 워크아웃 등

- 금융권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의 금융·非금융 정책 지원제도\*를 동시 가동하여 부실우려 기업의 장기 성장기반 마련 유도

\* 예) 사업재편 지원(산업부), 회생 컨설팅(중기부), 구조개선자금 지원(캠코) 등

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신용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하고,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

-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시 활용중인 RTI\* 및 LTI\*\* 운영현황 점검

\* 임대업 이자상환비율(Rent-to-Interest) \*\* 소득 대비 대출비율(Loan-to-Income)

## □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제고 및 위기발생 대비 관리 강화

- 위기시 은행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버퍼를 확대하고, 비은행권까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대상을 확대\* 검토

\* 비은행에 대해서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외화유동성 확충을 지도

- 은행의 안정적인 외화조달 및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해 신규 조달·차환 및 만기상환 관리 강화\*

\* 예) 자본성 외화증권 상환조건 등을 점검하고 위기단계 증가 등 유사시 대응방안 마련

## □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연착륙 유도

- 차주단위 DSR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은행권 운영현황 및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
-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업권별·차주별 가계대출 취급현황 및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

## 나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

◆ 금융시장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능력 제고

□ (은행)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적립 확대 유도

○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(연 1회 이상)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 검토

○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\*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하여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

\* 예) 업종별·부문별 익스포저, 환율·금리·주가 변동에 따른 영향 등

○ 금리 상승 및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은행에 대한 자본관리 강화 유도\*

\* 예) 취약은행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 등 자본관리계획 마련을 요청하고, 은행 지주·은행의 자체 배당가능이익 산출 및 보고체계 점검

□ (중소서민)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·여전사 등을 조기 식별\*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

\* 예) 카드사의 경우 연체전이율, 정상입금률,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등 연체율에 선행하는 평가지표를 활용한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

○ 경기둔화 심화에 대비하여 다중채무자 여신 등 취약부문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, 결제성 리블빙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

□ (보험) 위기상황분석,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회사를 조기 선별하고 선제적인 자본 확충 유도

○ 회계기준 변경(IFRS9 도입)에 따라 도입된 보험회사의 기대신용손실 모형 기반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의 적정성 점검

□ (금융투자) 증시하락, 금리상승, 환율변동 등 잠재위험요인 현실화에 대비하여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\* 점검

\* 예) 극단적 시장상황을 감안한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

## 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

◆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,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 구축

□ (은행)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체계, 항목, 기준 등에 관한 개선방안\* 마련 추진

\* 예)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,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 개선 등

○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 마련

○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승수\* 적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

\* 바젤Ⅲ 운영리스크 산출시 은행별로 영업이익과 과거 10년간 내부 손실금액을 이용해 산출하는 계수로 내부손실승수가 클수록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증가

○ 필라2 리스크평가 항목 정비·개편, 평가등급 차별화 등을 통한 평가결과 활용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

□ (보험) 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新계약자배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이익원천 분석을 위한 新손익분석기준 검토

○ K-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하고 예비신청절차 등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기반 조성

○ 新제도(IFRS17·K-ICS)의 안정적 정착·지원을 위한 「新제도 질의 대응시스템」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무 이슈 등에 적극 대응

□ (금융투자)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및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반영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 검토

○ 부동산 익스포저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\* 추진

\* (예) NCR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값 차등화

- (중소서민) 여전사의 자산·부채 만기구조 관리실태(ALM)를 점검하여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마련\*

\* (예)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에 관련 사항 반영 등

- 상호금융의 부동산·건설업 업종별 한도규제('24.12월 시행)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검토

## 2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

### 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

- ◆ 서민·자영업자·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,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양극화 완화

#### ① 취약차주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- 서민·자영업자·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내실화

- 매출액 급감,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차주의 자금부담 완화방안 마련
-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를 위한 운영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신용대출119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강화
- 중소기업·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센터\*를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 확대 유도

\* 금감원 홈페이지(파인) 內 「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(가칭)」 오픈('23.2분기 예정)

- 플랫폼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\* 제공 추진

\* (네이버)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, (배달의 민족) 배민아카데미 등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의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, 현장방문 등을 지속하는 한편,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 참여 유도\*

\* 우수사례(Best Practice) 적극 발굴 및 전파

## □ 코로나19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 지원
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리스크 분석\*을 실시하고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현황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
  - \* 예) 업종, 신용등급, 소득 등을 활용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
- 신용위험평가 등을 토대로 상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차주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한 연착륙 방안 마련 모색

## ②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개선

### □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

- 은행 점포폐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, 우체국 창구제휴 등 대체수단 활성화\* 유도
  - \* 예) 은행권과 점포운영 모범사례 공유,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
- 점포폐쇄 전 안내 강화, 사전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「점포폐쇄 공동절차」 운영 내실화 추진
- 미성년자 금융거래 및 상속처리시 불편사항 등 반복·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무절차 등 개선 추진
-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소비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\* 확대
  - \*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·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
- ‘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’의 은행권 도입\* 이후 사용자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타 금융업권(증권, 보험 등)으로 확대 등 검토
  - \* 예산 확보, 앱 개발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'23년 상반기 중 금융앱 출시 예정

### □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

-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·할증제도\*를 개선하고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\*\*을 마련하는 등 국민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 추진
  - \* 예)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기본등급 적용,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경력 미인정
  - \*\* 예) 백내장,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우선 추진



-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·개선\*을 지원하고, 보험계약대출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\*\* 부여 추진

\* 예) ① 암 등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  
 ②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 개선

\*\* (현행) 대출금리 = 기준금리(해약환급금 적용금리, 例 4.5%) + 가산금리  
 (개선) 대출금리 = 선택금리(例 0~4.5%) + 가산금리, 차액은 보험금 지급시 상계

## 나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

◆ 금융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

###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인프라 구축

#### □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 집중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

- 「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」을 고도화하여 위험징후 조기 감지 역량을 확충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\*하여 자율개선 유도

\* 청약 철회비율·고령자 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대비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판매정보 및 판매절차 등을 자율 점검·개선

- 소비자피해 발생 초기에 방송,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콘텐츠\*를 활용하여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하는 등 소비자 경각심 제고

\* (매체) 금감원 SNS, 소셜라이브, YTN 「생생경제」 (콘텐츠) 카드뉴스, AI 아나운서 동영상 뉴스 등

#### 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고도화

-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 개선 유도

\* (현행) 8~10월 평가 후 12월 발표 (개선) 5~9월 평가 후 11월 발표 추진

- 금융회사의 신속한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건수 등 계량부문의 평가방식 개선\* 추진

\* 자율조정 성립률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량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검토

## □ 금소법 안착을 위한 현장 감독 및 지원 강화

- 적합성 원칙 등 금소법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현황\*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미흡사항 개선 지도

\* 예) 판매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'상품숙지의무' 이행현황, 투자자 성향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마련 여부 등

-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금소법 이행 미흡사례를 발굴하고 해당회사 CCO 등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율적 개선 지원

## □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

-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,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 및 템플릿 개발\*

\* 예) 고등학생 'e-러닝' 개편, 태블릿을 활용한 고령층 대상 실습형 교육프로그램 도입

## ②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

### □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분쟁발생 예방 노력 강화

- 당사자간 다툼이 동일한 분쟁 건, 법률 및 의료쟁점 등 사안별 유형화가 가능한 분쟁을 유형별로 집중 검토하여 일괄처리\*

\* 분조위에 일괄 부의·처리하거나 분조위 등을 통해 분쟁처리 가이드라인 마련

- 쟁점 관련 계량지표 선정이 가능\*한 분쟁유형은 계량화를 통해 처리방향을 판단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

\* 예) 백내장 분쟁 관련 연령, 혼탁도 분류등급, 수술 전 시력검사 결과 등

- 분쟁을 유발하는 모호한 약관 등은 유관부서 환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빈발 민원 사례 등을 소비자에게 공시하여 유사 분쟁 재발 방지

### □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

- 객관식 문항 방식의 민원 신청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고,

- 민원신청 전에 빠른 해결방법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FAQ, 분쟁사례 등을 제공하고, 챗봇을 통해 민원 상담

## 다 **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노력 강화**

◆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 강화

### □ **불법금융행위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**

-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권 및 검·경찰 등과의 체계적인 공조체계\*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\*\*하고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 소비자정보 발령

\* 보이스피싱 합수단 참여(검찰청), 보이스피싱 One-Stop 통합신고·접수시스템 구축(경찰청), 신종 불법금융광고 차단 조치(과기부, 인터넷진흥원 등)

\*\* 신종 사기수법 실시간 현장 전파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조기 파악 및 실행 등

-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내부통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흡 사항 개선 유도
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시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(지점 방문)\*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

\* '22.12월 시행된 일괄 지급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제약

- 불법사금융 취약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\*을 마련하고 메신저피싱 가상 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

\* 예) ① 대리입금·내구제 대출 : 10~20대(온라인채널, 학교 교육 활용)

② 불법사금융 : 20~50대 직장인·자영업자(온오프라인 채널 병행, 직장 내 교육)

③ 유사수신·불법금융투자 : 60대 이상(지자체 등의 오프라인 채널 활용)

### □ **보험사기 방지 역량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**

-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\*을 추진하고 「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」 등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\*\*

\* 공·민영보험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개정 등

\*\* 공·민영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등

-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「홍보 협의체」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피해예방요령 등 정보제공 강화

### □ **리딩방, SNS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 행위 집중 감시**

- 불법 리딩방,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,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

### 3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

#### 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

◆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(Big Blur)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

##### ①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 육성

##### □ 금융데이터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

- 금융·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·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\* 검토

\*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영·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 지원

-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 실태 및 AI 관련 리스크\*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

\* 예)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특정 고객집단 차별, 설명가능성 부족에 따른 금융소비자 분쟁 등

##### □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기반 조성

-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 지원, 시장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필요 후속조치 준비

- 입법 논의 참여, 주요 해외사례 조사·연구 및 시장 자율규제 관련 자문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

-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(22.6월 kick-off)를 통해 내부통제, 투자자 보호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 제공

- 가상자산 관련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에 선제적 대응

-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방안 등 검토

## ② IT 리스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

### □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·점검 강화

-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 비상대응 계획\*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

\* 장애대응 절차 및 매뉴얼, 시스템 이중화 여부, 예비장비 확보 및 백업장비 운영 등

- 모바일앱 및 웹앱\* 관련 이용자 인증체계\*\*, 단말기 보안통제,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거버넌스 체계 등을 중점 검사

\* One-App : 하나의 플랫폼('앱')에서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통합 제공

\*\* SSO(Single Sign-on), 안전한 인증방법(예:다중 인증 등) 및 로그인 정보 검증 등

### □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및 시스템 정비

-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검토
- 최근의 IT사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

## ③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

### □ 대출비교플랫폼 영업확대 등에 대비한 판매 및 광고규제 정비

-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록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면밀히 심사하고 등록 이후 알고리즘 유지·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
- 온라인 플랫폼 광고, 금융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新유형 광고 활성화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규제체계 정비

### □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상품 개발-판매단계 통합적 모니터링 실시

- 혁신적인 신상품 출시 후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이슈\*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약관 수정 권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점검
- 플랫폼을 통한 예금·보험상품 맞춤형 비교·추천서비스 도입시 소비자 권익보호 사항\*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약관 마련 유도

\* (예)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책임소재, 금소법상 이용자 권리·의무 등

## 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

◆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업권별 감독제도 및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ES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 마련

### ①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

- 디지털화·플랫폼화 및 금융·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 검토
    - (공통) 업권별·법령별 금융회사 업무범위, 사전·사후보고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 정비 추진
    - (은행) 금융·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개선 검토
      -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감독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·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혁신 기반 구축
    - (보험)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
      - 전화 모집(TM)시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 등을 결합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'하이브리드 모집' 도입방안 검토
    - (자산운용)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운용현황 점검
    - (퇴직연금) 현장점검 등을 통해 新퇴직연금제도\* 안착을 유도하고 금리공시 체계 개편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질적 성장 기반 구축
- \* 디폴트옵션 도입,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,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

### ②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

- 대체거래소(ATS) 인가 및 감독체계 정비
    - 대체거래소(ATS)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'최선집행의무\* 가이드라인' 마련
- \* 투자매매·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(가격, 수수료, 매매체결 가능성 등)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



## □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제고

- 글로벌 정합성 제고,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,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추진(금융위 공동)
-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(FIMS)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新운영체계 도입 등 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

## ③ ESG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부합하는 감독체계 마련

### □ ESG 관련 감독체계 정비

-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SSB)의 「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」 제정 추진에 맞추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\*와 국내 기준 정비 추진
  - \* '23.1월 국내 ESG 공시기준 제개정 등을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KSSB) 설립 예정
- ESG 펀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\* 검토
  - \* 예) 투자자에게 매분기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
- ESG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, 유용한 투자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

### □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인프라 구축

- 녹색 부문으로의 신속·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금융권내 녹색 분류체계\* 적용 시스템 구축 지원
  - \*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택소노미) 발표(환경부 주관, '23년중 적용 예정)
- 기후리스크 관리모형\*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유도 및 비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
  - \*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자연재해 피해 비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재무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량모형

## 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

◆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업무관행의 과감한 혁신 추진

### ① 금융혁신을 위한 감독 인프라 확충

#### □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·운영

-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\*을 신설하여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·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·개선

\* (감독혁신조정팀) 규제개혁 및 감독관행 혁신사항 발굴 및 개선 등

#### □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지원

-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·관리하는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 구축
- 신기술사업금융업자<sup>1)</sup>, 외국·일반사모펀드의 등록심사 프로세스를 개선<sup>2)</sup> 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약관심사 절차 등 개선<sup>3)</sup>

1) 등록 서류접수 시 현장 리뷰(Quick-Review) 신설,

2) 펀드신속심사실 신설, 펀드등록·심사시스템 전면 개선 등

3) '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' 신설 및 심사단계 통보 세분화

### ② 검사·제재업무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

#### □ 검사업무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

-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해당연도 정기검사 대상(예정)을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검사 준비시간 보장
- 광범위한 검사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검사목적·범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중점 검사부문별로 모듈화 추진

#### □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및 경직적 제재관행 개선

- 제재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 하는 등 제재대상자 방어권 제고 관련 개선사항 제도화
- 제재내역 공시 홈페이지에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충실한 자율통제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제고
-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규행위의 경우 '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'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재 대체조치 활성화 추진

## 4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

### 가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

◆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기반을 조성하고,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 유도

#### □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강화

- 은행지주·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
-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\* 등 점검

\* 예 : 은행지주·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「지배구조법」 준수 여부,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(KPI)의 장기성과 연계 여부 등

-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부문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(Matrix) 운영 관련 개선방안 검토
-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\*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,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

\* 이사회 운영, 그룹 리스크 통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

-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\*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방안 마련

\*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 불가

#### □ 금융회사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책임경영 환경 조성

-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\*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협평가·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

\* 예) 대규모 부동산PF 및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회사 참여 관련 의사결정체계 및 리스크 검토 등

- 금융지주의 빅데이터 등 고객정보 제공·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그룹 내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방안 검토

- 「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(Best Practice)」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
-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
-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 적시 공유 및 소통협력관 업무미팅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역량 강화
-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대응체계\* 마련

\* 일정규모 이상 거래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 실시 등

## 나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

- ◆ 투자자 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고, 공시·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

### ① 자본시장 공정기반 확충

#### □ 공매도 감독역량 확충 및 감독 강화

-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\*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
- \* 예) 운영 및 소속 임직원의 독립성, 대차거래 및 매매내역 관련 사항 등
-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(주식대차-주문수탁-주문집행-사후관리) 업무처리 적정성 등 점검

#### □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·독립성 제고

-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(IRP)\* 제도 도입 추진

\* 독립리서치회사(IRP) : Independent Reserch Provider

## □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권 시장 투명성 제고

-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, 공시의무자 부담 경감·규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
-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

## ② 공시 및 회계 정보의 투명성·신뢰도 제고

### □ 공시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인프라 확충

-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 정비
-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\* 등에 따라 발행·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·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
\* 토큰 증권 발행·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

-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영문 DART 공시정보 확대 추진

### □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회계법인 역량 제고

- 회계부정 위험요소별로 회계오류 적발률을 분석하고,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기준(항목수, 중요도 등) 재정비
- 횡령·배임,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단호히 대처

-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\*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분식 가담·조력\*\* 기업 등은 수사·세무당국 등 적극 통보

\* (FY'22) 자산 2조원 이상 → (FY'23) 5천억원~2조원 → (FY'24) 1천억원~5천억원

\*\* 예) 매출 부풀리기의 거래상대방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·인수증 등을 수취·발행

-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新제도\*의 안착을 지원하고 감독 강화
  - \* 예) 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등과 연계  
 ②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지정제외 점수 부과
-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가이드 및 모범사례 마련
  - 지정감사 비중의 적정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방식·재지정절차 등 개선

### ③ 조사업무 인프라 개선 및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 엄단

#### □ 효과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

- 불공정거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사 지원시스템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\* 강화
  - \* 예) 투자조합 모니터링 기능 : 투자조합 및 조합원 연계성 시각화, 과거 사건 연관 조합 및 조합원의 신규 지분공시 시 알림메시지 등
- 유관기관과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공정거래 위험 요인 신속 파악을 위해 정보 수집·분석 역량 강화

#### □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

-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단속하고 엄중 조치
-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\*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·모니터링하고 혐의 발견시 집중 조사

\* 사모 전환사채 발행내역을 전수점검하고 조사·공시·회계 부서 공동 "합동대응반" 운영을 통해 유기적 대응

- CB·BW 인수인의 지분공시 위반\*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 심사 활용

\* 예) CB·BW를 인수하여 해당 법인 지분의 5%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하는 사례

- TRS\*, CFD\*\*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

\* TRS(총수익스왑, Total Return Swap), \*\* CFD(차액결제거래, Contract For Difference)



## 다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·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

◆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 및 관행에 엄정 대응

### □ 금리 상승기 소비자피해 우려 부당영업행위 근절

-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, 금리인하요구권 운영\* 적정성,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 점검

\* ① 핵심정보 안내 여부, ② 신청요건 표준화 및 심사기준 투명화, ③ 운영실적 비교 공시 등

-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\* 등 불건전·불공정행위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\*\* 및 위탁은행의 내부통제체계 점검

\* 예) 여신취급 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 등

\*\* 예) 수수료 부당 수취,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·중개 행위, 1社 전속의무 위반 등

### □ 보험권 완전판매 문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

- 초년도 모집수수료 규제 도입에 따른 우회적 수수료 지급\* 현황 및 시장 영향 등을 분석 및 점검

\* 정착지원금, 시책 등 설계사에게 별도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미리 제공하는 행위

- 부당승환\*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안내서 양식 내실화

\* 기존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비슷한 계약을 신규 체결

-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사 선임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개선\*

\* 예)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원칙적 선임 동의 등

### □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강화

- 증권사 신탁·랩어카운트 관련 채권 자전거래·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 검사

-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·불건전행위\* 집중 점검

\* 대주주·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, 대주주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 등